



## 복지국가로 가는 길, 한국은 지금 어디에?

### : ② 한국 사회경제모델의 나아갈 길

2015.03.05 | 박형준\_새사연 연구위원 | hyeungjpark@gmail.com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소득주도 성장 등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관한 담론들은 이미 다 나와 있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노동과 시민사회가 한국사회의 지배블록을 형성하고 있는 초국적 국가-자본 동맹에 당당한 협상주체로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로 힘을 모으는 일이 필요하다.

#### 한국 사회경제모델의 역사적 경로

한국 사회경제체제는 OECD 국가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저부담-저지출의 ‘작은 정부’, 낮은 공공사회복지비 지출, 높은 부패지수-낮은 정부 신뢰도, 낮은 사회 성원 간 신뢰도, 낮은 노조 조직률 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 지표들은 노동시간, 삶의 만족도, 산재사망률, 자살률 등 삶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들에서 최하위 그룹에 속하는 한국의 실정과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갖는다(표1 참조).

표1. 주요 사회지표 국가순위 비교

사회지표	미국	독일	스웨덴	일본	한국
삶의 만족도	14	19	3	23	23
사회관계망	19	14	14	19	26
주관적 건강	14	19	3	23	23
여가	21	7	9	24	18
사회지출	19	7	3	17	26
자살률	13	16	6	2	1
살인률	12	22	17	27	4
고용불안정	8	21	5	12	2
장시간노동	11	17	27	2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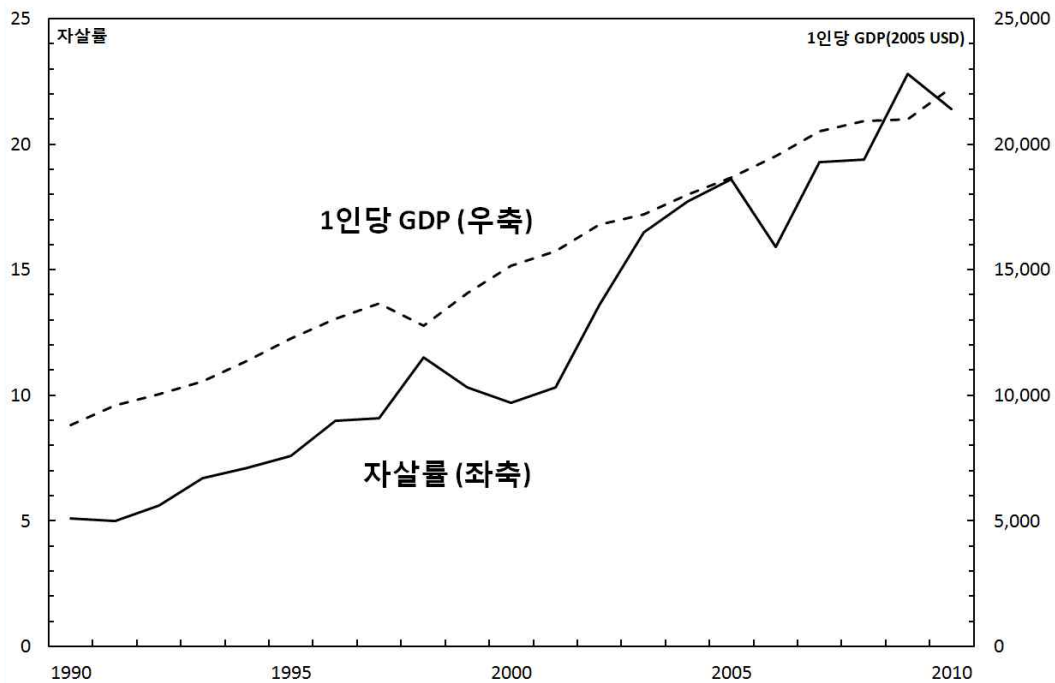
\*데이터 별 최근 자료로, 기준년도는 상이함.

출처: OECD; 김승원, 최상명(2014), 273쪽 <표1> 요약정리



김승원·최상명(2014)은 OECD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이러한 삶의 질에 관련된 지표들이 경제성장 그 자체보다는 소득분배 수준과 더 많은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연구 결과를 보여주었다. 같은 연구 논문에서 두 사람은 이른바 “자살 친화적 성장”이라는 한국에서만 발견되는 특별한 현상을 분석해 주목을 끌었다.<sup>1)</sup> 다른 나라에서는 1인당 GDP의 상승과 자살률 하락이 동반되는 반면, 한국은 두 지표가 나란히 움직였다는 것이다(그림5 참조).

그림1. 한국의 자살 친화적 성장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를 나타냄.

출처: OECD Statistics

성장을 하면 할수록 국민들의 삶이 점점 더 불행해지는 ‘자살 친화적 성장 모델’은 한국 사회경제체제 발전과정의 중심 화두였던 다음 두 가지 문제설정 방식에 근본적 의문을 제기한다. 첫째는 이른바 ‘박정희의 공과 과’라는 문제설정 방식이다. 둘째는 포스트-1997 구조개혁과 관련해 ‘천민자본주의’ 대 ‘시장만능주의’라는 이분법적 논의 구도이다. 이 두 가지 문제설정 방식을 비판적으로 다루면서, 한국 사회경제체제가 지나온 변화의 궤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동안 박정희 체제가 민주주의를 억압한 과는 있지만, 고도성장을 이룬 공은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널리 받아들여져 왔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성장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성장 그 자체를 목적으로 여기는 경향을 보인다. 성장은 국민의 후생과 복

1) 미국은 2000년을 기점으로 한국과 유사하게 1인당 GDP 상승과 자살률 상승이 동시에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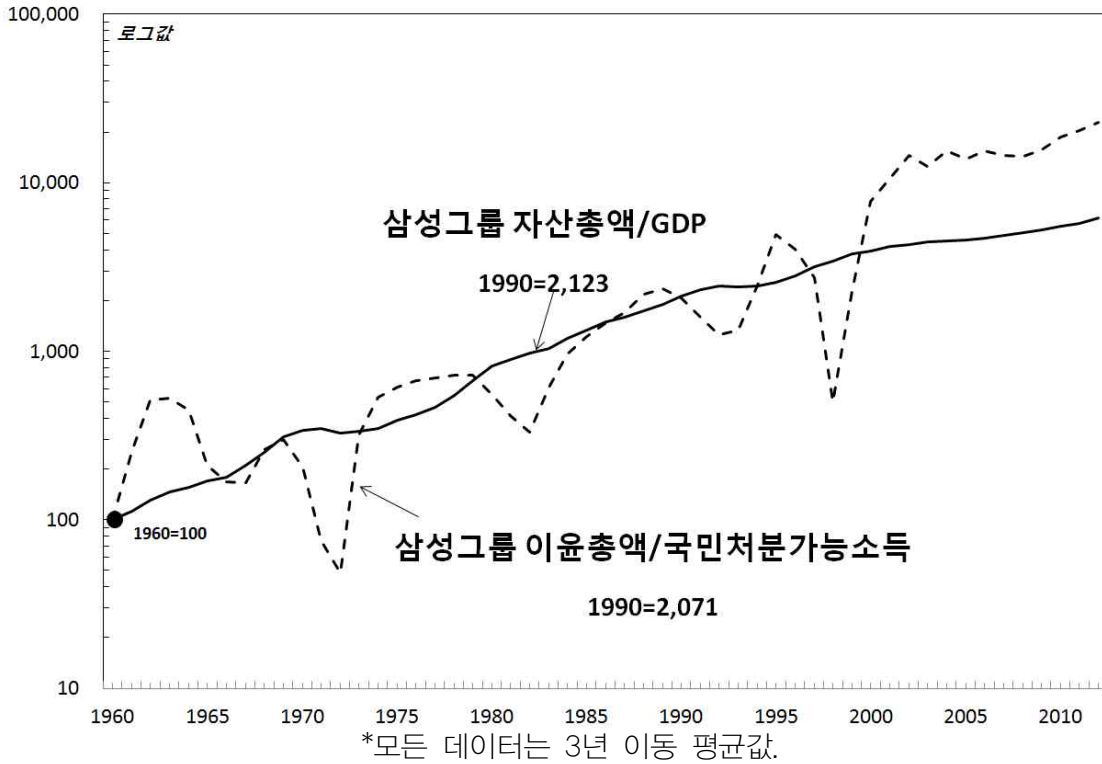
지, 행복을 증진시킬 때만 의미가 있다. 앞선 보고서에서 자본주의 다양성 모델 간 비교를 통해 확인했듯이, 이 점에 있어서 북유럽형 모델이 가장 뛰어났다. 성장과 복지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가장 큰 동력은 ‘사민주의적 코포라티즘’<sup>2)</sup>이라 불리는 노-사-정 ‘협치’이다. 이는 민주주의를 바탕으로만 이룰 수 있는 일이었다. 독일로 대표되는 대륙형 모델도 북유럽형보다는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그 근간에는 민주주의적 협치가 자리 잡고 있다. 반대로 한국의 성장모델은 노동과 시민사회를 인정하지 않고, 국가-재벌 동맹의 권력 강화를 위해, 그리고 경제개발을 위해 국민들을 순전히 수단으로 동원함으로써 만들어졌다. 박정희 체제는 루이스 머포드(Mumford, 1970)가 말한 노동자들로 조립된 노동기계labor machine, 군인들로 조립된 군사기계military machine, 그리고 컨트롤 타워에 해당하는 관료기계bureaucratic machine의 복합체로 구성된 거대기계(megamachine)을 건설한 것이다(박형준, 2013: 150). 이른바 캐치-업 성장은 그 거대한 권력기계의 특성 중 하나일 뿐 독립적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박정희 때 기본골격이 확립된 한국 사회경제모델은 발전국가론에서 흔히 국가자율성이라고 불리는 군부독재의 ‘강한 국가’가 주도했다. “국가와 재벌의 지배 연합이 산업 발전을 위한 ‘관민 협력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재벌에 대한 성과 규율처럼 ‘발전 규율’ 메커니즘이 작동하며, 다른 한편으로 세계 자본주의에 개방하는 방식과 국제 분업상의 위치가 잘 조절”해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다는 의미에서 국가가 ‘자율성’을 가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다(이병천, 2014: 26). 하지만 국가의 자율성이 계급적 이해에서 자유로웠다는 것으로 해석되면 안 된다. 한국의 ‘강한 국가’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지만, 국가의 사회적 공공성은 전혀 강하지 못했다. 앞에서 확인했듯이 한국정부의 특성은 조금 거두고 조금 쓰는 매우 ‘작은 국가’이다. 국가는 억압적인 방식으로 국민들을 생산을 위한 노동력으로 동원했다. 노동기본권, 정치기본권, 사회기본권, 공공복지제도는 철저히 무시되었다. 반면 ‘압축 성장’을 주도한 권위주의 국가는 재벌 기업들에게 직접 보조금 지급, 세금 감면, 특별 이자율과 환율 혜택, 다양한 형태의 국가 보증, 외국 차관 배분, 수탈적인 노동 정책 및 보호무역 정책 수립 등의 특혜를 제공했다. 재벌들이 외국으로 돈을 빼내거나 사치스럽게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는 의미에서 ‘발전 규율’일 뿐, 철저히 재벌의 이익에 복무하는 ‘강한 국가’였다. 권위주의 국가는 억압적 정치로 재벌 기업들에게 순종적인 저임금 노동력을 무제한 공급해 주는 한편, 여러 특혜를 통해 나라 안팎의 경쟁자들이 그들의 사업 영역에 들어오지 못하게 진입장벽을 설치함으로써, 재벌들에게 배타적으로 이윤의 흐름을 집중시켜 준 것이다.

2) 1960년대 유럽에서 정치적 안정과 지속적 경제성장의 목표 달성을 위해 임금을 억제하고 노동시장을 통제하는 등 정부, 고용주, 노동자 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각종 위원회가 등장했음. 그런 위원회의 작동 원리, 이념을 가리키는 말. 오늘날 한국의 노사정위원회와 유사한 형태.



그림2. 비용의 사회화 이익의 사유화 모델



출처: 한국은행; 삼성, 1998; 삼성 (Online, <http://www.samsung.co.kr>);  
박형준(2013: 230)의 그림 4.2 수정 인용.

그림6은 이러한 재벌 밀어주기의 역사적 궤적을 나타낸 것이다. 차트는 삼성그룹의 자산총액과 이윤총액 변화를 각각 GDP와 국민처분가능소득<sup>3)</sup>의 증가에 대비해 표현한 것이다. 그림1의 자살 친화적 성장 그래프와 겹쳐서 보면, 한국의 사회경제모델은 ‘비용의 사회화, 이익의 사유화’의 전형임을 확인시켜 준다. 그림2의 실선 그래프는 1960년의 삼성 총자산을 GDP로 나눈 값을 100으로 환산했을 때, 그 비율이 반세기 동안 얼마나 증가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며, 점선 그래프는 같은 방식으로 국민처분가능소득 대비 삼성그룹의 이윤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군부독재가 끝나고, 이른바 신자유주의 체제로의 전환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기점인 1990년 두 값 모두 2,100 정도로 커졌다. 이는 1960년부터 30년 간 삼성의 자산과 이윤이 국민경제의 발전 속도보다 20배 정도 빠르게 성장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정희 때 만들어진 “관민 협력”에 기초한 “집단적 조직자본주의”는 1980년대 중반 이후 변화의 물결에 휩싸이게 된다.<sup>4)</sup> 이 자본주의 모델을 지탱해 주던 두 개의 기둥에 균열이 간 것이다. 하나는 억압적 군부독재체제이고, 다른 하나는 냉전시대 반공의 보루로서 역할하며 받은 미국의 경제적 지원이다. 군사정권이 1987년 ‘전

3) 가계·기업·정부 등 국민경제 전체가 소비나 저축으로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의 규모.

4) 이병천(2014)의 표현을 가져왔다.



민항쟁'에 부딪혀 더 이상 독재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면서, 한국은 대통령 직선제를 계기로 민주화의 과정에 들어선다. 이후 대기업을 중심으로 민주노조 운동이 광범위하게 펼쳐졌고, 더 이상 재벌들은 순종적인 저임금 노동공급의 혜택을 이어갈 수 없게 된다. 이러한 국내적인 정치역관계의 변화와 함께 국제적 환경의 급속한 변화가 일어났다. 냉전의 종식과 더불어 자본주의 세계체제가 이른바 신자유주의로 재편된 것이다. 민주화와 세계화라는 이중적인 변화의 압력 속에서, 재벌들은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축적 양식과는 사뭇 다른 축적 체제를 찾아내야만 했다.

1994년 김영삼의 시드니 구상(혹은 세계화 선언)은 국가-자본 동맹의 변혁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김영삼 정부는 보수대연합의 산물로서 87년 체제가 형성한 민주화 세력 주도의 정치적 역관계를 다시 뒤집었다. 이후 이루어진 세계화 선언에는 외부에서 밀려오는 개방화, 자유화, 규제완화의 압력에 수동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용해 새로운 지배전략으로 삼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김영삼 정부는 '선진국 클럽' 처럼 알려져 있는 OECD에 가입을 준비하며 '2부 리그'에서 '1부 리그'로 승격을 도모하는 한편, OECD 가입조건인 자유화, 개방화, 규제완화 등의 제도개혁을 추진했다.<sup>5)</sup> 그런 가운데, 구체제의 상징인 경제기획원도 문을 닫았다. 국가 스스로 시장 쪽으로 무게중심을 이동시키는 개조운동을 펼친 것이다.

이런 변화의 도정에서 갑자기 1997년 금융경제위기가 터졌다. 1997년 위기를 계기로 정치경제적 개혁이 엄청나게 가속화되었다. 단계별로 서서히 실시하려던 '워싱턴 컨센서스'<sup>6)</sup>가 제시하는 정책들이 위기를 계기로 급격히 도입되었다. 그 결과, 한국 자본주의는 짧은 기간에 '거대한 전환'이란 이름으로 대변되는 매우 심대한 변화를 겪었다. 자본시장 개방으로 한국의 경제 체제는 세계시장에 깊숙이 통합돼버렸고, 급격히 팽창한 금융시장은 변동성이 심해졌으며, 안정된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가 되었다. 또한 짧은 시간 동안 국가의 개입은 '죄악시' 하고, 시장은 '신성불가침'한 영역처럼 여기는 사고방식이 정치권에 깊숙이 자리 잡았다. 심지어 진보세력의 지지로 당선된 노무현 전 대통령마저도 "권력이 시장[자본]으로 넘어갔다"고 말할 정도로,<sup>7)</sup>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 기조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

이러한 포스트-1997 구조조정과 관련해, 그동안 진보진영 내에서는 열띤 논의가

5) 1997년 위기의 충격으로, 우리는 보통 신자유주의적 개혁이 IMF의 압력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사실 IMF가 내세운 조건들은 이미 OECD 가입 조건에 다 포함되어 있었고, 김영삼 정부는 1999년 말까지 이행하겠다는 시간표를 제출한 상태에서 제도개혁을 진행시키고 있었다(박형준, 2013: 33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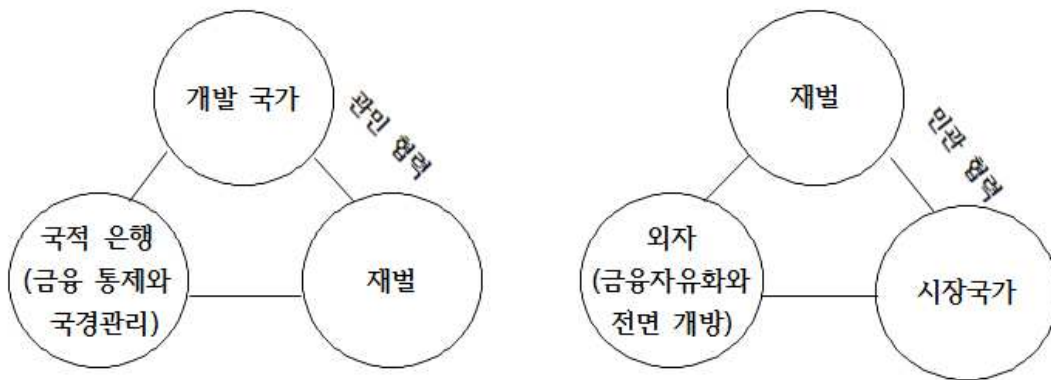
6) 1990년대 미국이 중남미 국가들에 제시했던 미국식 경제체제의 대외 확산 전략으로, 자율적인 시장경제체제를 바탕으로 한 무역 및 자본의 자유화, 탈규제를 통한 무한경쟁과 정부의 긴축재정, 민영화 및 정부 개입 축소 등을 골자로 함.

7) 2005년 7월 5일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시책 점검회의에서 한 발언.



펼쳐졌다. 97년 위기는 물론 그 이후의 성장 동력 저하와 사회적 양극화가 영·미 주주자본주의 도입으로 진행된 ‘비생산적’ 금융자본이 주도하는 금융화 혹은 금융 주도 축적 체제 때문이라고 보는 그룹과 모든 것이 국가 주도 개발주의에서 만들어진 정실주의 재벌 시스템의 존속 때문이라고 보는 그룹이 논의를 주도했다. 그밖에, 노동자 착취 강화를 통해 이윤율을 회복하려는 자본의 공세가 그 본성이라고 보는 정통 마르크스주의 견해를 비롯해 다양한 의견그룹들이 많이 있지만, 대중적인 논의는 앞의 두 그룹이 이끌었다. 장하준 교수로 대변되는 앞의 입장은 외국자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재벌과의 대타협을 통해 스웨덴 식 복지국가로 나아가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김상조, 장하성 교수로 대표되는 후자의 입장은 반독점 규제 강화와 전근대적 재벌 총수 ‘독재체제’를 해소하면서, 미국식 자유주의 ‘주주자본주의’로 전환해 가자는 경향이 강하다.

그림3. 개발자본주의 삼각 연계와 신자유주의 삼각 동맹<sup>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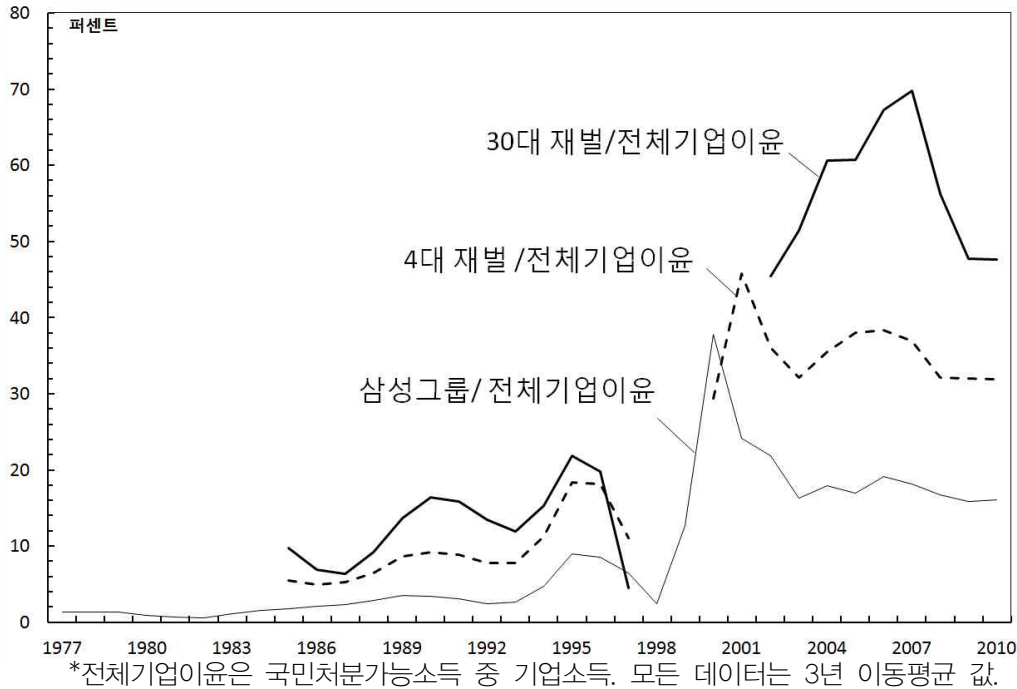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한국 사회경제모델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어느 것이 맞고 틀리다로 단정지을 수 없지만 시장과 국가, 재벌과 외국자본을 다소 이상주의적인 입장에서 이분법적으로 다루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런 이분법적 접근방식은 정확히 무엇이 변했고, 무엇이 지속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작업을 방해한다. 이병천(2014: 173)은 두 관점 모두를 비판하면서, 구체제에서 신체제로 이행에서의 연속과 단절을 설명한다(그림3 참조).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노동과 시민사회를 사회적 협력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배타적 국가-자본 동맹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변화한 것은 국가-자본 동맹의 구성과 위계이다. 다시 말해, 권위주의적 개발 국가-국유 은행-재벌 간의 “삼각 연계”를 주축으로, 대내적으로는 국민 기본권 억압, 대외적으로는 보호주의를 통해 국적 자본의 고도성장을 추구하던 지배블록이 ‘정글의 법칙’을 추구하는 재벌-외국자본-시장지향 국가의 “신자유주의 삼각 동맹”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구체제에서는 권위주의 국가가 지배블록 내

8) 그림은 이병천(2014: 173)의 그림3 인용.



에서 지휘봉을 잡았다면, 신체제에서는 재벌이 그 위치로 올라갔다고 본다. 권위주의 정부를 약화시킨 것은 학생운동이 주도한 민중항쟁이었지만, 독재 권력을 찬양하던 재벌들이 무임승차해 권력의 핵심으로 올라선 것이다.

그림4. 기업이윤의 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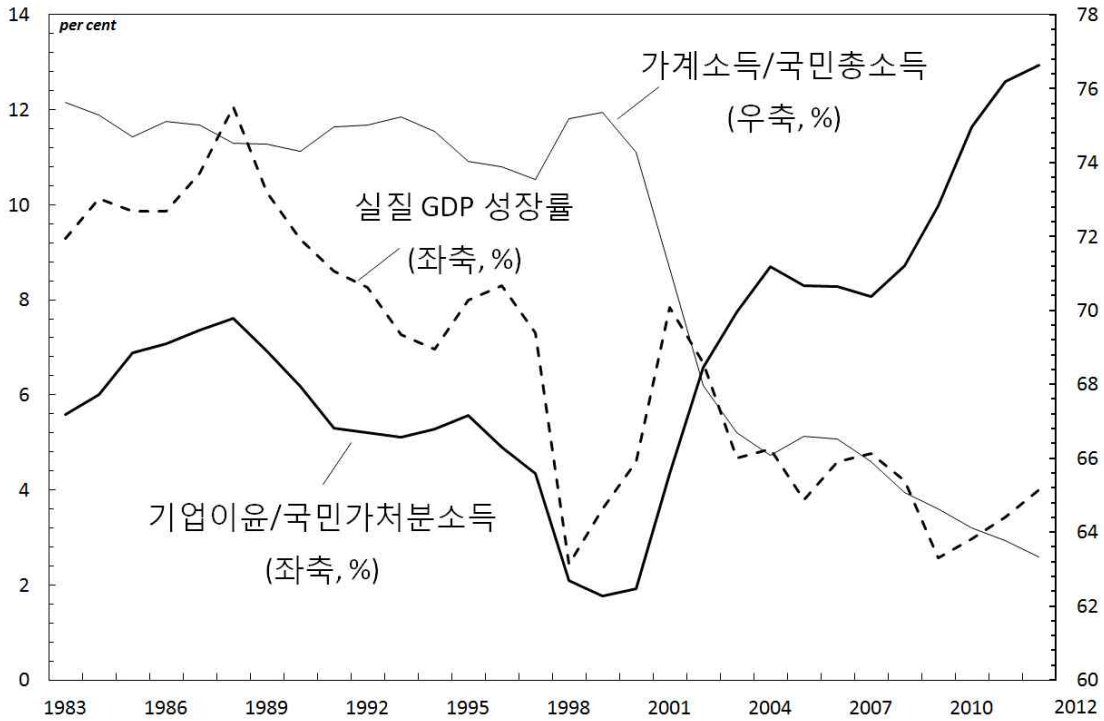


출처: 한국은행, 공정거래위원회, 삼성 1998, 삼성(Onlind);  
박형준(2013: 362) 그림 6.3 수정 인용.

지배적 자본의 입장에서 보면, 신자유주의 삼각 동맹은 매우 ‘성공적’인 결과를 낳았다. 2008년 세계금융공황 이후 구조적인 불황에 빠져, 현재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97년 위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전보다 자본 축적을 훨씬 더 강화할 수 있었다. 그림4는 한국의 재벌기업들이 2000년대 들어,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 전대 미문의 수준으로 이윤을 집중시켰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차트는 3개의 그래프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업 전체의 소득에 대비해 삼성그룹, 상위 4대 재벌, 그리고 30대 재벌 그룹의 순이윤 비율을 표현한 것이다. 각각의 비율이 매년 크게 변화하기 때문에 10년 간 평균을 이야기하는 편이 나올 듯싶다. 1987년부터 1996년까지 위기 이전 10년간 기업 전체 이윤 대비 재벌그룹들의 평균 이윤 비율을 보면, 30대 그룹이 14.7퍼센트, 4대 그룹이 10.7퍼센트, 그리고 삼성그룹이 4.4퍼센트였다. 위기의 수렁에서 빠져나온 이후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이 평균 비율은 각각, 55퍼센트, 34.2퍼센트, 17.1퍼센트로 높아졌다. 97년 위기 전후로 재벌들의 이윤 비중이 세 배에서 네 배 정도 더 높아진 것이다.



그림5. 양극화 저성장 체제



\*모든 데이터는 3년 이동 평균값.

출처: 한국은행

재벌의 어마어마한 이윤 축적은 고용-임금-분배 없는 이른바 “3無 성장” 을 낳았다.<sup>9)</sup> 대기업들의 기술개발과 생산성 향상이 수출호조와 이윤 급증에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정규직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정규직 일을 하청이나 파견노동으로 대체하고, 중소 하청기업에 대해 납품가 후려치기 등 이른바 갑을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이윤의 집중을 이루었다. ‘구멍가게’, 카페, 빵집, 심지어 떡볶이 집까지 대기업의 손길이 뻗치면서, 대부분의 자영업자들과 그들에 딸린 ‘알바생’ 들은 사실상 대기업의 저임금 하청근로자로 전환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림5는 신자유주의 삼각 동맹이 만들어낸 ‘양극화 저성장체제’ 의 일면을 포착한 것이다. 차트는 3개의 그래프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실질 GDP성장률이고, 다른 하나는 국민처분가능소득 대비 법인기업이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국민총소득 대비 가계소득을 나타낸 것이다.

특징적인 것은 97년 위기 이전에는 GDP 성장률과 법인기업이윤의 비중이 나란히 움직였는데, 이후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다. GDP성장률은 1987년부터 1996년까지 연 평균 8.7퍼센트였는데, 2001-2010년의 연 평균 GDP성장률은 4.2퍼센트로 낮아졌다. 그렇지만 법인기업의 이윤이 국민처분가능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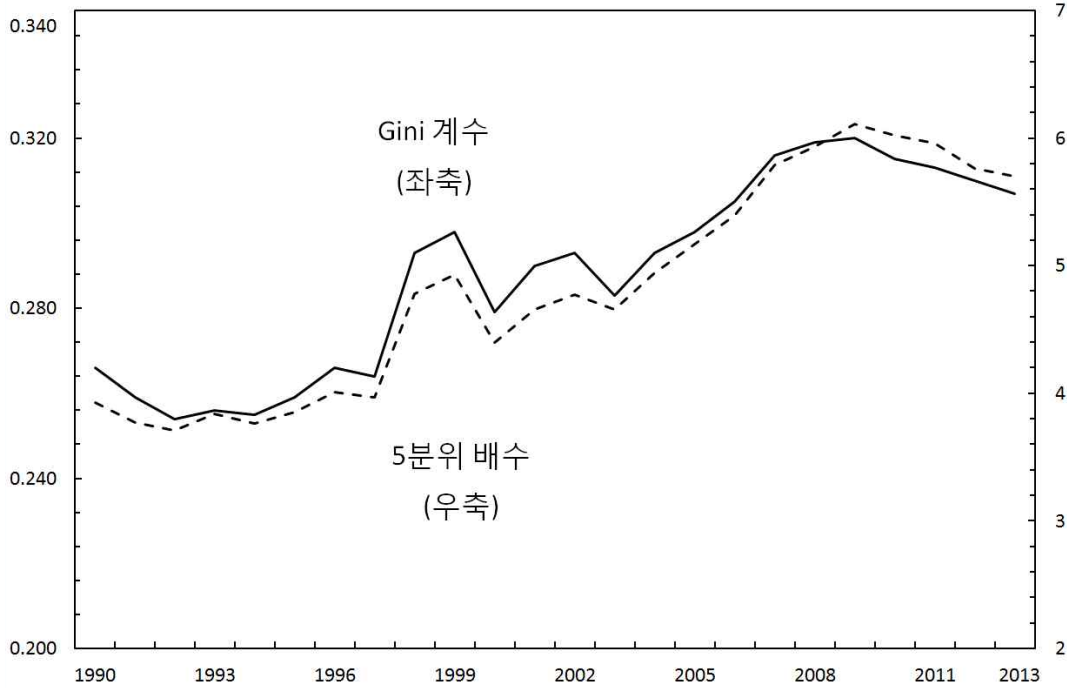
9) 고용 없는 성장, 임금인상 없는 성장, 분배 없는 성장을 의미하는 3무 성장은 장하성(2014)의 표현을 인용하였다.





2000년 4.2퍼센트에서 2010년 13.8퍼센트로 3배 규모가 되었다. 반면, 국민총소득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73.6퍼센트에서 63퍼센트로 약 14퍼센트 포인트 낮아졌다.

그림6. 불평등의 심화



\*5분위 배수는 도시 2인 이상 가구.

출처: 통계청

가계소득 비중의 전반적 하락과 더불어 가계 내의 소득불평등은 더 심화되었다. 그림6은 대표적인 불평등 측정 지표인 지니계수와 5분위 배수를 나타낸 것이다. 1991년에 지니계수는 0.259였는데, 2010년 이 수치는 0.320으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5분위 배수는 3.8에서 6.2로 증가했다. 이는 하위 20퍼센트에 속하는 가구의 평균 소득에 비해 소득상위 20퍼센트에 속하는 가구의 평균소득이 60퍼센트 더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만큼 소득불평등도가 증가한 것이다.

그림 5와 6의 수치들은 왜 우리서민들 모두가 '이대로는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는지를 대략 보여주고 있다. 이런 와중에 재벌 총수일가들은 그야말로 떼돈을 벌었다. 10대 그룹 총수들이 보유한 주식가치의 변화를 보면, 2000년 9,370억 원에서 2011년에는 28조 3,560억으로 서른 배 규모로 성장했다. 게다가 그들이 받는 배당 소득도 2001년 310억 원에서 2011년 17,80억 원으로 배당금 수령 규모가 여섯 배 수준으로 커졌다. 이런 사실들은 '투기적 외국자본'과 '생산적 국내자본'이란 이분법적 접근방식이 허구적임을 말해주고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자본주의 체제개편의 본성은 전 지구적 차원에서 펼쳐진 소유권과 축적공간의 통합이었고,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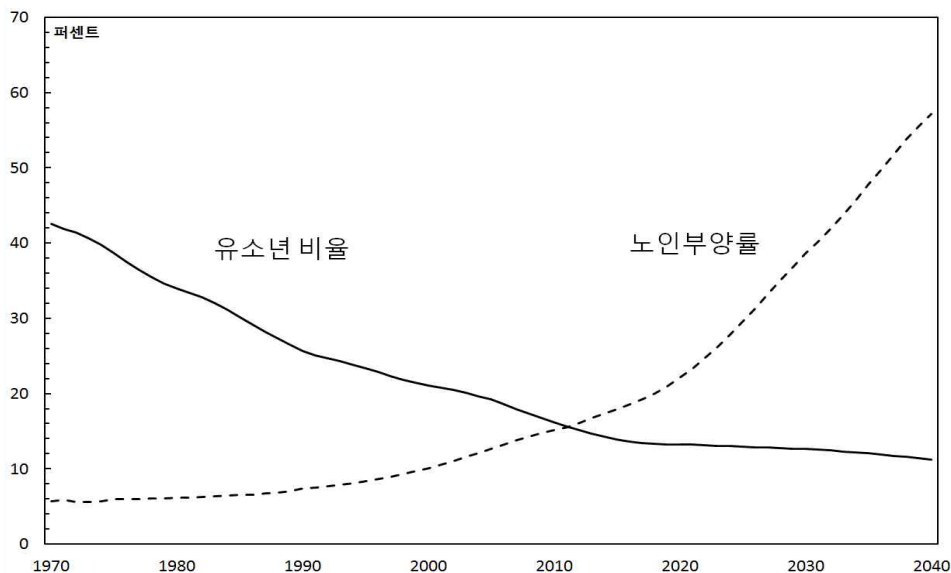


국의 재벌들은 그 흐름에 편승해, “지역적 한계를 넘어 초국적인 부재소유자의 구조 속으로 스스로를 편입시켰다” (박형준, 2013: 351). 이는 국내적으로는 국가-자본 동맹체제에 외국자본을 한 주체로 끌어들이는 것을 의미했고, 이들 신자유주의 삼각 동맹은 양극화 성장전략을 통해 비용의 사회화, 이익의 사유화를 ‘효율적’으로 해내고 있다.

### 우리 앞에 놓인 난관들

한국 사회경제체제가 가지고 있는 저부담-저지출의 ‘작은 정부’, 낮은 공공사회 복지비 지출, 높은 부패지수-낮은 정부 신뢰도, 낮은 사회 성원 간 신뢰도, 낮은 노조 조직률, 낮은 삶의 만족도, 높은 산재 사망률과 자살률 등의 특징들은 지난 반세기 동안 국가-자본 동맹이 추구한 재벌 중심 축적체제의 어두운 그늘이라고 볼 수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자본의 축적을 위해 국민들을 억압적으로 동원해 놓고, 후생과 복지는 각자도생으로 해결하라는 식이었다. 국가-자본 동맹은 아직까지 노동과 시민사회를 사회적 협의 주체로서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진보진영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미래의 사회경제체제를 전환하든, 스스로의 힘으로 해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주체적 역량 강화라는 난제를 잠시 제쳐 놓는다고 해도, 한국 사회경제체제의 경로변경을 위해 극복해야 할 여러 객관적 어려움이 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객관적 난관들을 확인해 보고 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

그림7. 늪어가는 한국사회



\*유소년 비율은 전체 인구 중 0~14세까지 인구 비중이고, 노인부양률은 65세 이상 인구수를 경제활동 가능 인구인 15~64세까지의 인구수로 나눈 비율이다.

출처: 통계청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해주세요.



첫 번째 고려해야 할 문제는 인구학적 변화이다. 우리나라의 총인구 증가율은 1970년대 정부정책으로 산아 제한 캠페인이 펼쳐지면서부터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했고, 2030년을 기점으로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그 때부터는 인구가 줄기 시작한다는 뜻이다. 총인구의 감소전망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인구구성 비율의 변화이다. 출산율의 저하로 유소년 인구비중은 지속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 경제활동 인구가 부양해야 할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점점 늘어날 전망이다. 1970년 노인 부양률은 5.6퍼센트에 불과했지만, 이 비율은 2013년 현재 16.7퍼센트로 늘어나 있고, 앞으로는 증가속도가 더 빨라져, 2030년에는 38.7퍼센트, 2040년에는 57퍼센트까지 늘어날 전망이다.<sup>10)</sup> 다시 말해, 현재는 경제활동 인구 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는 꼴이라면, 2040년에는 경제활동 인구 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 그만큼 경제 활력은 떨어지는 반면, 복지재원은 더 많이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2. 주요 국가별 노인부양률 비교(1980~2040)

	도달연도			증가소요연수	
	고령화 사회 (7% 이상)	고령 사회 (14% 이상)	초고령 사회 (20% 이상)	7 → 14%	14 → 20%
일본	1970	1994	2006	24	12
프랑스	1864	1979	2018	115	39
독일	1932	1972	2009	40	37
이탈리아	1927	1988	2006	61	18
미국	1942	2015	2036	73	21
한국	2000	2018	2026	18	8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 2006

현시점에서 특히 고려해야 할 점은 고령화의 속도이다. 표2는 주요국의 고령화 속도를 비교해 놓은 것인데,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인인구 비중이 총인구의 7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면 고령화 사회, 14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면 고령사회, 20퍼센트 이상이면 초고령(또는 후기고령)사회라고 한다. 지금까지 고령화에서 고령사회,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의 전환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는 일본이었다. 일본은 각각 24년, 12년이 걸렸다. 독일은 고령화에서 고령사회로 전환하는데 40년, 미국은 73년, 프랑스는 무려 115년이 걸린 것을 보면, 일본의 속도는 타의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매우 빨랐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전환 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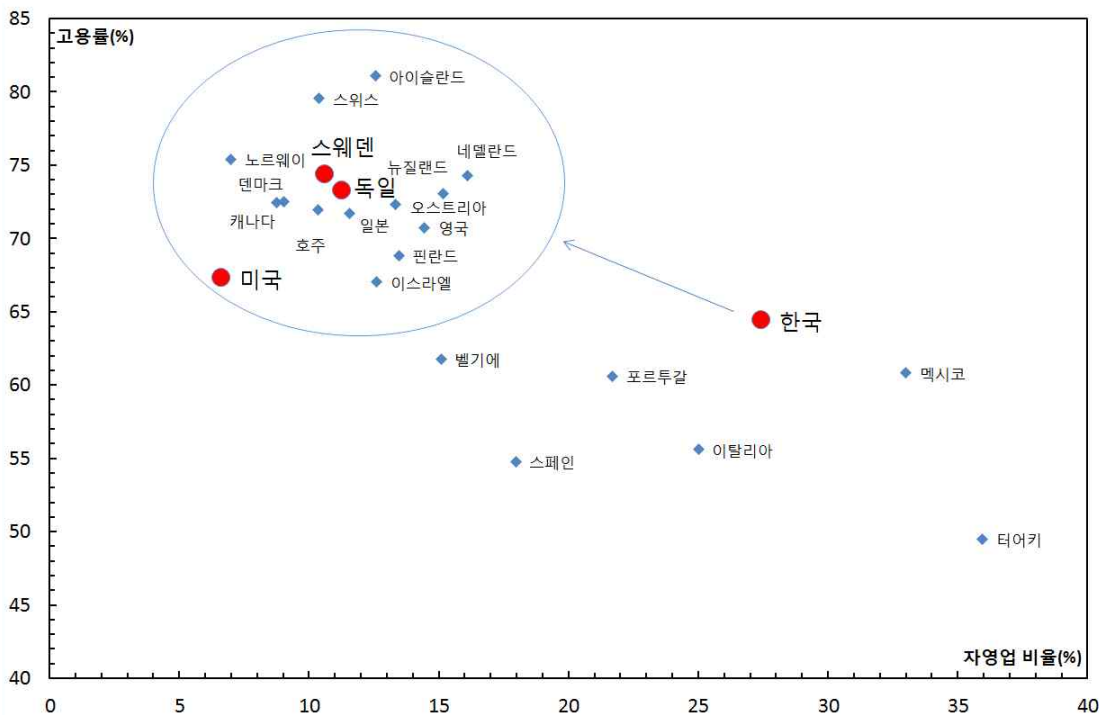
10) 노인부양률은 생산가능인구 1백 명당 65세 이상 고령자수로서 퍼센트가 아닌 명 수로 표시하지만, 편의상 퍼센트로 표현했다.



도는 일본을 능가해, 고령화에서 고령사회로의 전환이 18년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고령화에서 초고령 사회로의 전환도 일본보다 적게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그만큼 경제성장 동력이 급격히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 고려해야 할 난제는 고용문제이다. ‘좋은 일자리야말로 가장 중요한 복지 제도’ 라는 말이 있듯이, 고용은 우리의 후생과 관련해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지점이다. 그림8은 OECD 국가들의 고용률과 자영업 비율을 비교해 놓은 것이다.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64퍼센트, 자영업 종사자 비율은 27퍼센트로, 상대적으로 자영업 비율이 높고 고용률이 낮은 편에 속한다.<sup>11)</sup>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멕시코 등 남유럽형 모델들이 한국과 비슷한 그룹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스웨덴과 독일 등 북유럽과 대륙형 모델들은 대부분 고용률 74퍼센트, 자영업 비율은 10퍼센트 안팎에 분포해 있다.

그림8. 고용률과 자영업 비율 비교



출처: OECD Statistics

자영업 비율이 높다는 사실 그 자체를 놓고 좋은지 안 좋은지를 말할 수는 없지만, 높은 자영업 종사자 비율이 전통적인 문화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산업 위축의 결과물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97년 경제위기 이후 자영업 종사자 비율이 급속히 늘어났고, 최근에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조기퇴직으로 인해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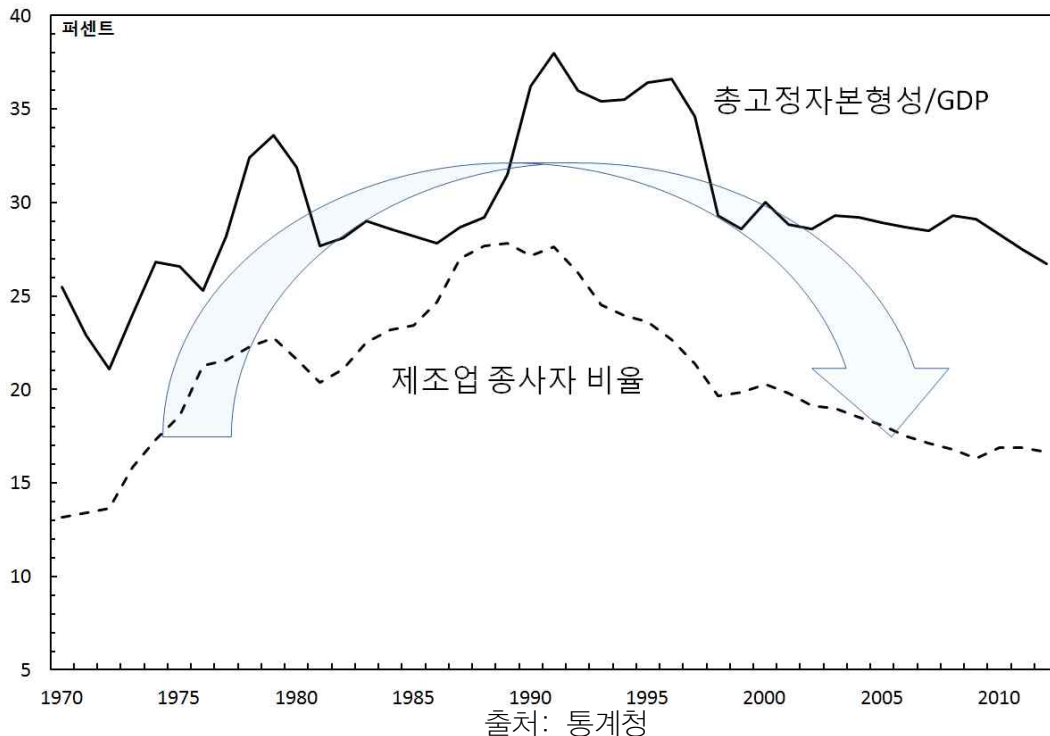
11) 통계청 고용률 통계는 약 60퍼센트로 나오지만, 국제 비교를 위해 OECD 통계수치를 사용.



영업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게다가 높은 자영업 비율은 곧 지나친 경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자영업의 채산성이 크게 떨어져 종사자들의 생계 문제로 이어진다. 실제로 대부분의 자영업이 카페, 빵집, ‘치맥’, 편의점에 몰려있어, 자영업 종사자들의 낮은 수익률 문제와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갑을 관계’에서 더 취약한 입지를 가질 수밖에 없는 문제를 낳고 있다. 또한 이런 문제들은 저임금, 저질의 청년 ‘알바’ 일자리 창출로 직결된다.

한국의 사회경제모델은 제조업 중심의 급속한 산업화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크루그먼(Krugman, 1994)이 주장했듯이, 개발독재 시대의 고도성장은 생산성보다는 엄청난 요소투입, 즉 국가가 동원한 노동과 자본이 높은 GDP증가로 환산되어 나타난 것이다. 그림13은 대략 1990년까지 그 모델이 지속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림의 두 그래프는 GDP에서 총고정자본형성이 차지하는 비중과 제조업의 고용 비중을 각각 나타낸 것이다. 제조업 고용비중은 1970년 13퍼센트에서 1980년대 말 28퍼센트의 최고점에 이른 후 감소하기 시작해, 최근 17퍼센트까지 떨어졌다. 총고정자본형성도 1970년 GDP대비 26퍼센트에서 1991년 38퍼센트까지 증가한 뒤 감소하기 시작해, 최근 27퍼센트까지 하락했다.

그림9. 탈산업사회 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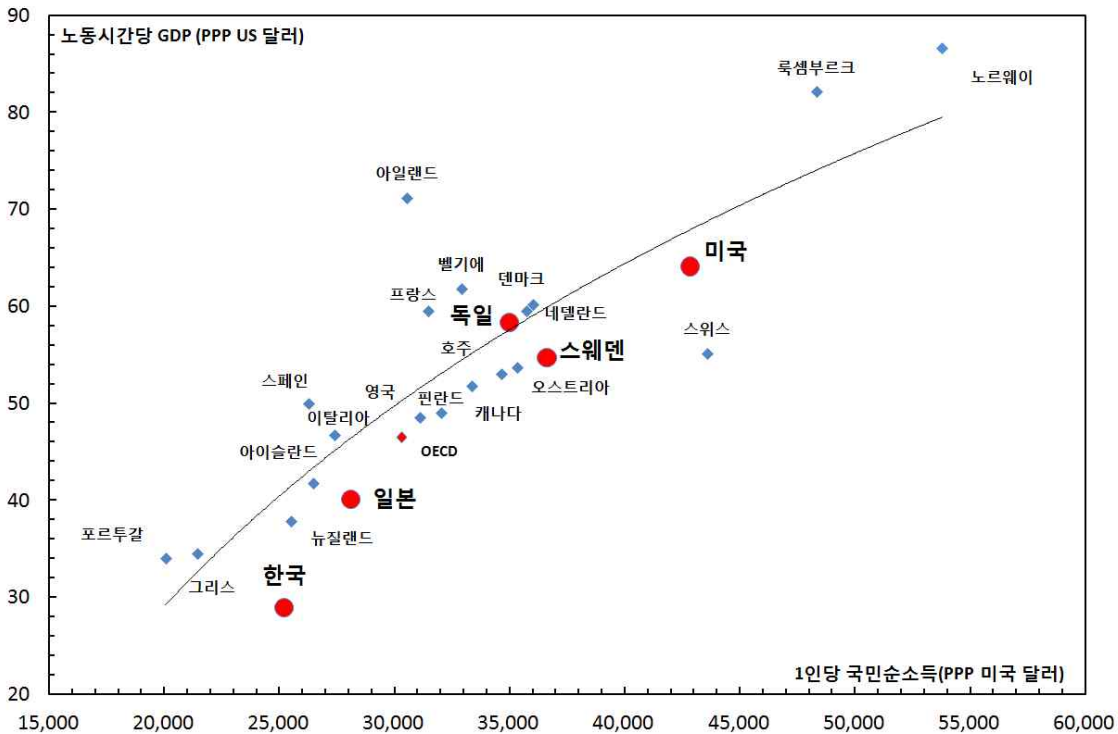


97년 위기 이후 투자 감소에 관한 논쟁에서 금융화 혹은 주주자본주의가 원인이라는 주장이 많이 제기되었다. 그런 측면이 없지 않겠지만, 이 문제는 흔히 탈산업사



회라고 일컫는 자본주의 발전과정의 ‘자연스런’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영미모델, 북유럽모델, 그리고 대륙모델 모두 GDP 대비 총고정자본형성이 우리보다 10퍼센트 포인트 낮은 수준에 분포하고 있다. 다소 허망하게 끝났지만, 노무현 정부 때 추진한 아시아 금융허브, 물류 허브 프로젝트는 이런 변화와 관련되어 있다. 제조업 고용비중으로 보면, 우리는 이미 과하게 탈산업화 되었다. 17퍼센트로 우리와 비슷한 미국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비교 대상 국가들이 20퍼센트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독일과 일본은 26퍼센트 전후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서비스업 고용비중은 ‘선진국’ 수준인 75퍼센트를 넘어섰다. 문제는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비스업 쪽 노동생산성이 매우 낮다는 사실이다. OECD 통계에 따르면, 1989-2009년에 한국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은 미국 대비 31퍼센트에서 66퍼센트로 증가했지만,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은 42퍼센트에서 49퍼센트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는 한국의 서비스업이 상대적으로 저임금 저부가가치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뜻이다.

그림10. 고진로 성장체제로



복지-성장 선순환 관계를 원활하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노동생산성을 훨씬 높여야 하는 과제가 있다. 그림14는 OECD 국가들의 1인당 국민순소득과 노동시간당 GDP를 함께 표현한 것인데, 이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한국은 구매력 평가 기준, 1인당 국민순소득은 2만 5천 달러로 일본과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따라왔지만, 노동생산성을 의미하는 노동시간당 GDP는 29달러로 최하위 수준이다. 일본의



70퍼센트 수준이고, 독일, 스웨덴, 미국의 50퍼센트 수준이다. 앞에서 확인한 것처럼, 경제활동 인구의 상대적 비중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로 들어가기 때문에 노동생산성의 증가는 더욱더 중요해진다. 노동생산성이 크게 증가하지 않으면, GDP성장이 일본처럼 정체할 가능성이 높다. 지식기반 경제, 창조 경제, 기술융복합 산업 등 여러 이름으로 이 문제를 돌파하려는 시도들이 회자되고는 있지만, 국민경제 차원에서 어떻게 이를 실현해야 할 수 있을지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잡혀 있지 않다.

지금까지 OECD 국가들과의 비교 속에서, 한국 사회경제모델의 현 위치를 파악하고, 지금까지 걸어온 궤적에서 벗어나 보다 나은 방향으로 경로를 변경하는 도정에 놓인 과제들을 확인해 보았다. 이 논문에서 다른 사항들 이외에도 우리가 넘어서야 할 무수히 많은 장애물들을 만날 것이다.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소득주도 성장 등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관한 담론들은 이미 다 나와 있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노동과 시민사회가 한국사회의 지배블록을 형성하고 있는 초국적 국가-자본 동맹에 당당한 협상주체로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로 힘을 모으는 일이 필요하다. 우리가 모범으로 삼고 있는 독일이나 스웨덴 유형의 자본주의 다양성 모델들의 근간은 민주주의적인 사회적 조정기제였다. 사회적 통합과 신뢰 제고, 민주적 거버넌스를 이루지 못하면, 이 글에서 언급했던 한국 사회경제모델의 경로변경에 필요한 여러 과제들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이다. ▶

#### 참고자료

- 김상조, 유종일, 홍종학, 《한국경제 새판 짜기: 박정희 이상과 신자유주의 미신을 넘어서》 (미들하우스, 2007).
- 김상조, 《중흥무진 한국경제: 재벌과 모피아의 함정에서 탈출하라》 (오마이북, 2012).
- 김인춘, 〈자본주의 다양성과 한국의 새로운 발전모델〉, 《한국사회학》 제41집 4호(2007).
- 박형준, 《재벌, 한국을 지배하는 초국적 자본한국사회학》 (책세상, 2013).
- 안현호·류동민, 〈한국에서 신자유주의의 전개와 이론적 대안에 관한 검토〉, 《사회경제평론》 제35호(2010)
- 유종일(역음), 《박정희의 맨얼굴》 (시사IN북, 2011)
- 이병천(역음), 《세계화 시대 한국 자본주의: 진단과 대안》 (한울, 2007)
- 이병천, 《한국 경제론의 충돌》 (후마니타스, 2012)
- \_\_\_\_\_, 《한국 자본주의 모델》 (책세상, 2014)
- 임현진, 〈한국의 발전 경험과 대안 모색: 새로운 발전모델을 찾아서〉, 《한국사회학》 제40집 1호(2006).
- 장하성, 《한국 자본주의》 (헤이북스, 2014)
- 장하준, 정승일, 《괘도난마 한국경제: 장하준 정승일의 걱정 대화》 (부키, 2005).
- 장하준, 정승일, 이종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부키, 2012).



주상영, 〈진보적 성당 담론의 현황과 평가〉, 《사회경제평론》 제41호(2013).  
김승원, 최상명, 〈경제성장·소득분배·사회지표 간의 관계분석을 통한 성장 중심 거시경제정책 평가〉, 《동향과 전망》 제91호(2014년 여름호), 한국사회과학연구소

Amable, Bruno. 2004. The Diversity of Modern Capital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Crouch, Colin and Wolfgang Streeck(eds.). 1997. Political Economy of Modern Capitalism. London: Sage.  
Esping-Andersen, G. 1990.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Hall, Peter and David Soskice. 2001. "An Introduction to Varieties of Capitalism." in P. Hall and D. Soskice(eds.), Varieties of Capitalism: The Institutional Foundations of Comparative Advantag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Johnson, Chalmers, MITI and the Japanese Miracle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2).  
Mumford, Lewis. The Myth of the Machine (Vol. II): The Pentagon of Power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1970)  
Peter A. Hall, David Soskice (eds.), Varieties of Capitalism: The Institutional Foundations of Comparative Advantag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Pontusson, Jonas. 2005. Inequality and Prosperity: Social Europe vs. Liberal America.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2015년 새사연 발간 보고서 목록

2015년 3월 5일 현재

아젠다	발간일	제목	작성자
한국경제	1/8	'가상의 적' 앞세운 구조개혁의 속살	정태인
세계경제	1/12	약 엔, 강 위안, '슈퍼 달러' 의 시대 도래?	박형준
고용,노동	1/15	노동시장 유연화, 만능 열쇠가 될 수 있을까?	김수현
주거	1/22	소수자가 된 무주택 서민의 미래는?	강세진
돌봄	1/26	'좋은 돌봄', 현 상황에서는 불가능	최정은
복지	2/3	복지 없는 노후는 '재앙' 이다	이은경
잇:북	2/11	2015년 전망보고서 종합 : 침체의 지속, 복지 축소 정책의 위기	미디어팀
고용,노동	2/16	허점투성이 월급으로 은폐되는 '장시간 노동'	이정아
고용,노동	2/24	월간 노동시장 모니터 : 2015년 1월 노동시장 분석	김수현
경제	2/27	복지국가로 가는 길, 한국은 지금 어디에?:①자본주의 다양성 모델들	박형준
경제	3/5	복지국가로 가는 길, 한국은 지금 어디에?:②한국사회경제모델의 나아갈 길	박형준